

덕수궁 구하기

천준호



덕수궁 앞에서의 1인 시위 중

서울시청 건너편에 있는 덕수궁은 오랫동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문화유산이다. 기세 좋게 서 있는 고층 빌딩 숲 속에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이 민족의 유구한 문화역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것 같아 대견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덕수궁으로 발걸음을 들여놓고 그 내력을 살펴 보다보면

여러 이유에서 한숨과 답답함을 참을 수 없어진다. 덕수궁에 남아 있는 영광과 오욕의 상처, 그리고 그 잔영 때문이다.

덕수궁은 서구 열강을 비롯한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자 주적으로 근대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대한제국의 심장부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곳이다. 그러나 일제는 국권 강탈 이후 대한제국을 폄하함과 동시에 덕수궁의 사지를 절단하고 숙박시설을 세우며 공원화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된다. 1910년 일제의 측량기술에 의

해 그려진 덕수궁 평면도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덕수궁 영역은 1/3에 불과하다.

임진왜란 당시 피난 갔던 선조가 서울로 돌아와 월산대군의 옛 집을 고쳐 정릉동 행궁이라 불러 쓰기 시작하면서 덕수궁의 역사는 시작된다. 선조는 죽을 때까지 16년간 이곳에 머물러 정사를 봤고,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과 중종이 즉위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광해군은 창덕궁을 증건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경운궁이라고 붙였다. 따라서 원래 이름은 덕수궁이 아니라 경운궁이라고 불러야 맞다. 덕수는 쫓겨난 황제 고종에게 일제가 붙여준 칭호였는데 그것이 경운궁이란 이름까지 빼앗아 덕수궁이 되고 말았다.

일제에 의해 경운궁에서 덕수궁으로

일제는 덕수궁을 가로지르는 길을 뚫고 담을 쌓아 덕수궁을 분할해 매각했다. 현재 남아 있는 덕수궁 모습은 그 과정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전각들뿐이다.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신문로 쪽으로 난 그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도 덕수궁이 분할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덕수궁의 아픈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증명전이다. 증명전은 지금 정동극장 옆 골목으로 들어서면 만나게 되는데 고종황제의 알현소, 연회장, 외국사절의 접견소로 쓰였던 곳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역사적 장소이다. 근대사의 산 교육장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민간 회사의 소유가 되어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방치되고 붕괴될 위험까지 있다. 서울시는 작년 10월 이곳을 '매입해 보존키로 했다'고 홍보하다가 불과 한 달만에 '경제적 가치가 없다'며 확보된 예산까지 이월시키는 작태를 보였다. 청계천복원사업비 확보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옛 덕수궁 터에 건축을 추진 중인 미국 대사관과 직원용 아파트의 예정지

그런데 필자의 가슴을 더욱 답답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제가 파괴한 문화유산과 근대사의 현장인 덕수궁의 자취는 당연히 보존되고 복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증명전은 아예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바로 옛 덕수궁 터에 15층 규모의 미국 대사관과 8층 규모의 대사관 직원용 아파트, 4층 규모의 군인숙소 신축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주재국의 문화유적지, 그것도 왕궁 터 위에 대규모 외교단지를 조성한 경우는 없었다. 애써 이와 비슷한 사례를 찾으면 일제식민지 시절 경복궁 터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세운 예를 들 수 있겠다. 한마디로 정상적인 외교관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설령 그것을 모르고 신축을 추진했다하더라도 궁궐터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 신축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주재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라도 마땅한 조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진다. 그 내막을 들쳐보면 굴절된 한미 관계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찾아 볼 수 있다.

먼저 미국이 덕수궁 터를 소유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자. 정동 지역에 미국이 처음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은 1883년으로서, 당시 세도가였던 민계호에게 구입했던 것이다. 그곳은 오늘날 하비브 하우스로 알려진 미국 대사의 숙소가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지어질 곳은 1948년 미국이 소유권을 갖게 된 곳으로 과거 덕수궁 환벽정과 선원전 영역의 일부가 걸쳐 있던 덕수궁 터이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이곳을 소유하게 됐을까. 일제 패망 이후 미군정 시절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의 역사와 주권의 상징이었던 궁궐 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미군정은 당시 그들이 도입한 차관의 상환을 현금 대신 미군정이 지목한 땅으로 대신 받겠다고 궁궐 터를 가져간 것이다. 법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미국이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미 대사관 신축 예정지인 옛 경기여고 터는 덕수궁과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선원전이 있던 곳으로, 일제가 전각을 헐고 경성제일고등여학교를 지은 자리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6년 서울시 명의로 재산교환양해각서를 체결해 미국과 교환하면서 오늘의 비극이 생긴 것이다. 당시 담당 관료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곳이 덕수궁터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동 지역에서 미국은 그들의 우월적 지위, 사대적이고 무지한 정부의 도움으로 현 미 대사관저 주변으로 그 영역을 넓혀 왔던 것이다.

둘째, 덕수궁 터 미 대사관과 아파트 신축허가 추진 과정을 보자. 미 대사관 신축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는 계기가 된 것은 지

난 해 5월 미국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진 다음이었다. 미국은 덕수궁 터에 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한국의 법보다는 그들의 이해와 편의를 우선 고려했다. 당연히 한국의 현행법과 충돌이 생겼고, 그럴 때마다 서울시장이나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오랜 관행대로 시장과 장관은 미국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비판 여론이 거세어지자 결국 주택건설촉진법의 예외조항 신설, 주차장 면적에 대한 특별대우가 유보됐다. '한국에서 미국이 결심하면 무엇이든 이뤄진다'는 오랜 관행을 미국은 그대로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이 결심하면 무엇이든 이뤄진다

셋째, 서울시와 정부 당국의 태도를 보자. 이번 문제에 관계된 기관은 서울시청을 비롯해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문화재청이다. 지난 정부 시절, 당초 대사관·아파트 신축을 둘러싼 미국의 협조 요청에 우호적이던 이 기관들은 '시민모임'이 구성되고 반대 여론이 거세어지자 입을 닫고 책임을 서로 미루기에 급급했다. 서울시장은 공약사항을 뒤집어 말을 바꿨고, 미국의 눈치를 보며 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조차 공론화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주제로 모여 한 결정이 '미국 대사관 신축 계획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표조사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우리 문화유적 보호를 위해 대체 부지 마련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해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 협조를 결의한 꼴이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계 당국은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모임'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 인허가를 위해 진행되는 문화재 지표조사는 반대하며 미국 측에 덕수궁 터 위

에 신축이 불가함을 밝히고 새로운 대체부지 마련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라'는 시민모임의 입장과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표조사를 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신축여부를 판단하자. 문화유적 보호의 취지는 동의하나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당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태이다.

.지하철을 타고 시청 역에 내리면 덕수궁과 쉽게 만날 수 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여러 궁궐 중에서 시민들의 접근이 가장 편리한 곳이 이곳이기도 하다. 시간을 내 꼭 한번 가볼 만하다. 주말에 가면 궁궐을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왕이면 시간을 내어 덕수궁 돌담길도 걸어봤으면 한다. 중명전도 찾아 보았으면 한다.

100여 년 전 주권을 상실하고 처절하게 유린당했던 덕수궁이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덕수궁 구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

천준호 juno@kyc.or.kr | 한국청년연합회(KYC) 서울지역 공동대표, 덕수궁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반대 시민모임 공동 집행위원장.